

대학의 교육기능 회고와 전망



장 상
이화여대 총장

I. 머리말

세계은행(World Bank)은 1998/1999년도의 “세계발전보고서 : 발전을 위한 지식”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가나가 1958년 동일한 수준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90년대에 이르러서는 6배의 차로 벌어진 이유를 경제발전에서의 지식 기여도의 차이로 설명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서구 선진국들이 2세기에 걸쳐 정착시킨 산업화를 불과 40년의 짧은 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던 저력은 대학교육의 기여에 있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다.

유교적인 지식사회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경제·사회적 기능은 광복 이후에 더욱 두드러졌다. 우리 대학사회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의 선진 지식을 도입 확산하고 우수인력의 양성과 배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정착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지식기반사회라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서도 유효할지를 새롭게 조망해야 할 시점이다.

II. 대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필요성

1990년대 들어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시대·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전만큼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OECD 국가와 선발 신흥공업국가 등 47개국 중 43위인 최하위권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지표는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서있는 엄연한 현실을 자각케 하면서 대학의 경쟁력과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하는 그 첫 번째 과제가 대학교육의 변화와 개혁임을 절감케 한다.

사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는 패러다임 상실의 결과이다. 정부 주도적인 불균형 성장정책 패러다임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낡은 틀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시대는 기존의 관념, 제도, 체제, 의식과 관행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와 제도의 개편과 새로운 전력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시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그 사회의 새로운 발전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제는 서구 대학의 연구개발과 교육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창의적인 지식과 생산적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공급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대학교육 시스템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라는 이 시대의 특징은 대학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롭고 급격한 환경변화를 경험 중이다. 냉전 종식과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에 따른 세계화, 인터넷 통신혁명에 의한 정보화,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유민주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보 자원이 다른 어떠한 자원보다 중시되는 '지식혁명'이 진행 중에 있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은 그러한 지식혁명의 승자가 결국 인류사회의 승자로 귀결되는 냉혹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새로운 사회 운영 논리를 개발 교육시키는 대학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황을 성찰적으로 회고하고,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점과 제약 요인, 그리고 한국 대학교육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찰해 봄으로써 대학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Ⅲ. 대학교육의 회고와 반성

1.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적 기능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 논의에서 출발하면, 대학은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경제발전이 기여한다. 그간 한국의 대학교육은 산업화과정에서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동시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생산적인 지식과 우수인력의 공급보다, 부와 명성 등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세습시키는 기존 질서의 강화기능(reinforcement function)에 치우칠 때 경제적 생산성은 물론 사회적 이동성마저 제약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요즘 우리 대학들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의 기회와 성과가 작용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과외망국론에서 보듯이 일부 지역의 부유층 자녀가 고액 과외로 일류 대학에 입학하고, 그러한 학벌을 중간 사다리로서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한다는 주장이다. 학생의 학습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능력이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면,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국민통합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이동성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생의 잠재적 학습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검증하기보다 단순 반복적 학습을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에 한정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대학입시의 학생 선발 기능이, 학생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여 자기 계발에 성공

“

대학교육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대학입시의 학생 선별 기능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보유한 생산성과 잠재력을
차등적으로 발견 및 계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고급인력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보유한 생산성과 잠재력을 차등적으로 발견 및 계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고급인력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대학교육이 인재의 능력에 대한 선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기업 등 인력 수요자들은 또 다른 여과장치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와 잠재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거나, 대학과 교수의 각종 추천서가 형식적 서류 요건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은 대학의 인재 선별기능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적인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재 선발이 대학의 교육성과 교수의 추천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2. 교육 내용과 방법

1980년대 이후 우리의 대학교육은 산업사회적인 대량생산 체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1년에 대입본고사 폐지 및 졸업정원제

도입과 더불어 대학정원은 크게 증가되어 왔다. 상당히 많은 대학의 입학정원이 '70년대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학생 수의 증가에 상응하는 교육시설의 확충, 교수 및 교육지원인력의 증원이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강좌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 방법과 기본원리에 대한 쌍방향적인 토론식 교육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수준에 치우침으로써 규격화된 표준 지식을 습득한 인력을 대량 배출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은 단편적이고 도구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에 안주하면서 불확실하고 다원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충분히 배양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인문사회분야의 교육 내용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외국 이론과 사례의 무비판적인 수용에 대해 우리 사회 민주화 여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우리와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발전 경로를 거쳐온 국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적실성(relevance)을 갖는가 문제이다. 또한 과학기술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그리고 교육 및 연구개발체제에 적합한 분야가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교육되었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이 석·박사과정과 학사과정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



다. 즉, 교육과정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사과정에서 대학원과정의 교육 내용을 압축적으로 교육시켜 학문적 조숙화(prematurity)를 유발함에 따라, 학문의 기초원리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대폭 증가했던 '80년대는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수출시장 여건이 변화되면서 경제의 고도성장 궤적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증원된 대학 졸업생을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취업기회가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취업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구조화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양교육과 기초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보다는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응용지식과 전문가격을 획득하는 데 몰두하는 풍조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풍조가 '90년대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원리와 결부되면서, 공급자인 대학의 교육 내용도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 전공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교양교육과 기초학술교육보다 우선시 되면서 교양교육과 기초학술교육의 양적, 질적 부실화를 초래했다. 사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대학 졸업자의 사회·문화활동의 제약을 고려할 때, 대학 졸업자의 이후 교양생활 수준은 그가 대학에서 받은 교양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양교육과 기초학문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성 함양이나 세계관의 정립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공급되어야 하는 원초적인 학술 및 과학기술의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우리 대학의 학습량이 외국의 주요 대학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은 무엇보다 교수와 학생의 문제이지만 학교 시설 및 교육지원인력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학습량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서구 대학생들이 대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학 도시의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일상시간을 학습활동과 단체생활에 집중하는 데 비해, 우리 학생들은 기숙사 시설의 부족으로 하루 2~3시간을 통학시간으로 허비함으로써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학습 과제물만 많이 부과하는 교과목의 수강을 기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학들이 당면해 있는 재정구조의 고질적인 취약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 명문대학 수준으로 학습의 양과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의 개선 노력과 함께 시설 투자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또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학의 교육과정

'80년대 이후부터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전공의 분화와 전문화, 전공영역 간의 배타적 장벽, 졸업이수학점과 전공학점의 과다 등 학문적 폐쇄성과 분과성으로 요약되는 대학교육과정의 근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문적 분화와 전문화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서구학문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반면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유사 전공의 중복 개설 및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노출시켰다. 일부의 경우이지만 '80년대 이후 대학의 전공영역이 학문적 단위나 사회적 수요보다는 행정적 편의와 집단이기주의가 우선시 되면서 건전한 학문 발전과 우수 인재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 결과

“

학습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열린 제도의 도입은
전공·학과 단위간의 폐쇄성과 분파성을 극복하고,
학문적 통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회발전에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초학문 분과가 기피되면서
균형적인 학문발전이 침식당하는 학문적 편식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

미국의 명문 대학의 학사과정이 여전히 40~50여 개의 핵심전공 위주로 운영되는데 비해, 우리나라 종합대학들은 대부분 6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문 전공분야 사이의 전·후방 연계 효과나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과 학사과정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기대할 수 없었다. 행정적 편의나 집단이기주의로 분화되는 전공들 사이에 학술 교류와 협동이 통합적,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공간의 배타적인 장벽과 폐쇄적인 교육과정은 현대 학문의 조류인 학제성과 연계성(interconnectedness)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광역단위별 입학제와 학부제 시행, 졸업이수학점과 최소전공학점의 하향조정, 전과 및 편·입학 시행, 복수전공·부전공·다전공·연계전공 등의 폭넓은 전공선택권 부여 등의 대학교육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학습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열린 제도의 도입은 전공·학과 단위간의 폐쇄성과 분파성을 극복하고, 학문적 통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학문분과간의 장벽을 제거한 결과 시장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회발전에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초학문 분과가 기피되면서 균형적인 학문발전이 침식당하는 학문적 편식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Ⅳ. 대학교육의 전망과 기대

지난 세기말부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는 대학에 시·공간적으로 교육 대상과 내용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교육 대상의 변화와 사이버공간으로 인한 캠퍼스 확장이다. 지식혁명에 따른 지식 정보의 생성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은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학습 및 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층에 한정되던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전 연령층의 재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에 부합되는 학습능력과 사회활동 영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라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은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과 분교 설립 및 대학간 네트워크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개방·확장되고 있다. 이제 공간적으로 한정된 상아탑 개념은 365일 24시간 내내 열리는 가상대학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교수가



가르쳐 주는 내용을 학생이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의 수요와 학습자의 만족을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교육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추상적인 이론 중심에서 현장과 접목되는 실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를 전향적인 기회로 활용하면서 산업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기여한 이상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기여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의 대학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해야 한다. 사회 제 부문과의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사회 발전에 필요한 혁신적인 지식정보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창의적인 전문인재를 배출함으로써 그 사회의 선진화와 민주적·인간적 성숙을 위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학·연·산·관 협동 네트워크를 주도 하면서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촉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더욱 확대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제도, 대학교육 내용 및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적재를 선별하여 적소에 배치하는 여과 기능을 대학 스스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대학은 사회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성찰자로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방향,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 내용에 있어서 단기적인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적 지식 정보의 제공기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학교육 만큼은 이러한 단기적인 현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사회발전과 잠재적인 인간 계발에 기여하는 성찰적 지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의 내용은 사회의 여러 부문과의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사회발전에 필요한 혁신적인 지식정보

를 창출하고 교육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적인 시민의식과 교양의 토대 위에서, 불확실한 상황의 분석 능력과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의 여러 부문과의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사회발전에 필요한 혁신적인 지식정보를 창출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 내용은 인류사회와 과학기술의 운영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특화된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천착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방법은 정보화 등의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일방향적인 주입식 강의에서 교수와 학생이 상호 작용하는 쌍방향적인 체험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과 실제 사례의 분석,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강사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방법은 대학교육 대상이 직장 재교육과 평생교육 수요자인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넷째, 대학교육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 광역단위의 학생모집, 학부대학 도입 또는 학부제 시행, 전과 및 편·입학 확대, 졸업이수학점과 전공학점의 조정,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간의 교육기능 역할분담 등 대학교육 시스템의 개방화와 유연화는 대학 스스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학습수요자로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대학이 가는 방향이고, 인류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이다. 다만 대학교육 시스템의 개방화와 유연화가 기초학문 분야의 고사를 가져오지 않도록 사회발전의 지속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학문분과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V. 맺음말

시장경제원리가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도 시장의 수요공급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지난 근대화과정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이 희소자원일 때 대학은 공급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혁명과 개방체제의 도래에 따라 지식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지식공급자로서의 대학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불변적인 모방지식의 충실한 전달자 역할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창출, 검색, 선별, 중개하는 역할로의 전환이다. 컴퓨터가 설파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은 단순한 지식축적 이상의 상황분석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인력을 양성 및 선별할 때 가능하다. 대학 교육은 지식의 정태적인 축적(스토크)보다는 동태적 응용(플로우)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창의적 역동성을 유지하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와 학생이 질 높은 학습과정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기숙사와 첨단 교육시설의 구비, 수강학생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교수 및 전문 교육지원 인력의 충원에는 엄청난 재정 투자가 소요된다. 그러나 대학들이 거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등록금과 학생징원, 그리고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에 있어서 대학의 재량권을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부여해 가는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체제, 내용과 방법의 개선, 학습량의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확대와 선진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 높은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교수는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노력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합의된 교육열은 대학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내실을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작 대학입학 이후의 교육에는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열정을 우리 교육의 수월성과 내실을 드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수, 학생,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시점이다. 

장상

이화여대 수학과와 연세대 신학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실행위원, 협력과 증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이화여대 총장 및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이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바울의 역사관과 복음』, 『기독교와 세계』(공저), 『신학하며 사랑하며』(공·편저) 등이 있다.